

2020 로컬푸드 지수 완주군, 나주시, 옥천군 등 13개 우수 지자체 선정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정의(Justi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먹거리 정의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으면서 상생·환경·복지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먹거리 정의(Justice)의 실천은 지역사회가 문제인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정책(Local Food Plan)을 마련함으로써 시작 가능하다.

소비자시민모임과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과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했다.



로컬푸드 지수는 미국의 로커보어(Locavore) 지수를 모델로 해 국내 여건과 세계적인 먹거리 정책 추세를 고려하여 소비자시민모임의 주도로 정부, 농업 관련 기관, 학계, 유통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지수를 개발했고,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측정했다.

2020 로컬푸드지수 측정 개요



평가 대상

- 전국 159개 시·군
-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제주도 2개 시는 통합 평가



평가 범위

- 평가자료 기간
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 평가 분야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공급식 분야

2020 로컬푸드지수 평가 항목

분류		평가과제	지표명
로컬푸드 생산 소비체계	생산	기획생산촉진	인구대비 참여농업인 수 참여농업인 중 취약농업인 비율
	소비	안전성 관리	참여농업인 대비 안전성 검사 건수 지역푸드 인증 여부 및 실적 GAP 인증 실적
		지역먹거리 공공조달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기타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액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안정	적정 로컬푸드 소득(정산액) 농업인 비율	
먹거리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관련 신규 고용효과	
	시민참여	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공공정책	푸드플랜 공적추진체계 마련	

2020년 로컬푸드 지수 평가 결과 13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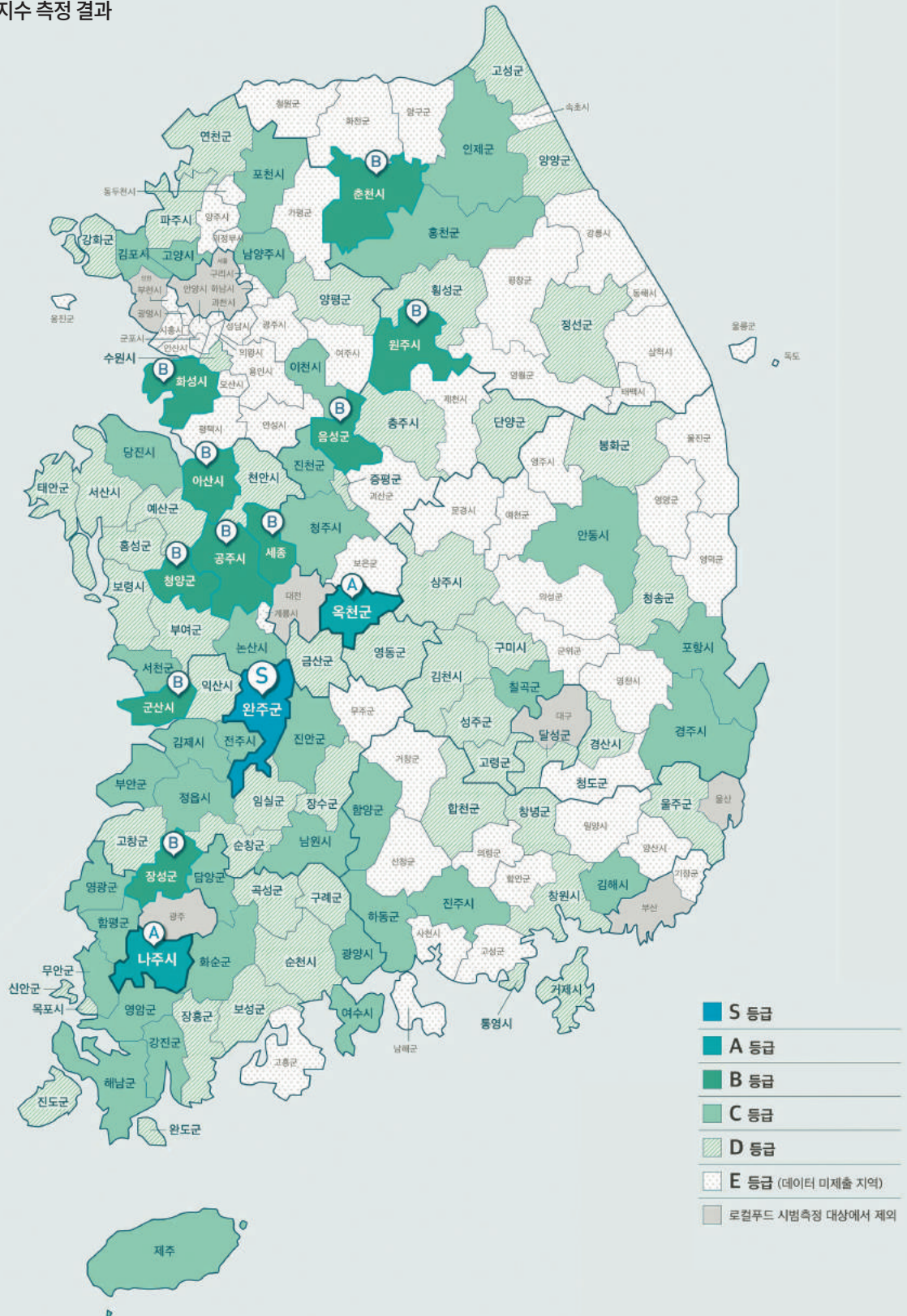
완주군 가장 우수한 S등급, 146개 지자체(91.8%) C등급 이하

로컬푸드 지수는 지자체의 로컬푸드 생산 소비체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①기획생산 촉진, ②안전성 관리, ③지역먹거리 공공조달 ④농가소득 안정, ⑤일자리 창출, ⑥시민참여, ⑦공공정책 등 7개 평가과제, 10개 지표를 평가하였고, 지자체별 제출 자료를 토대로 1차 집계 후 상위 지자체 대상 현장방문과 지자체장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점수에 따라 6가지 등급(S-A-B-C-D-E)을 부여하였다.

2020년 로컬푸드 지수 측정 대상 159개 지자체 중 평가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는 100개(62.9%)였고, 100개 지자체를 평가한 결과, 완주군이 S등급, 나주시와 옥천군 2개 지자체가 A등급, 공주시, 군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장성군, 청양군, 춘천시, 화성시(가나다 순) 등 10개 지자체가 B등급에 선정되어 13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등급별로 ▲S등급 1개(0.6%), ▲A등급 2개(1.3%), ▲B등급 10개(6.3%), ▲C등급 37개(23.3%), ▲D등급 50개(31.4%), ▲E등급 59개(37.1%)로 나타나, 159개 시·군 중 146개(91.8%) 지자체가 C등급 이하로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지역별 로컬푸드 현황

인구 1만명 당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 평균 2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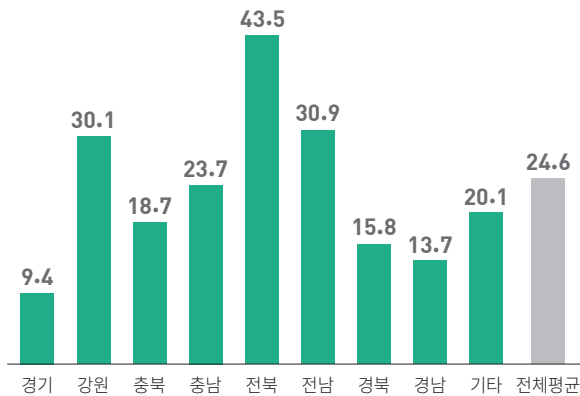
참여농업인 중 취약농업인 비율 평균 58.8%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및 농업기반이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인의 로컬푸드 참여 비율을 평가한 결과, 인구 1만명 당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는 평균 24.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북 지역이 인구 1만명 당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가 43.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전체 평균 24.6명의 약 1.7배 수준이다. 8개 지역 중 인구 1만명 당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가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지역은 전북(43.5명), 전남(30.9명), 강원(30.1명) 3개 지역뿐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인구 1만명 당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는 9.4명이었다.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중 농업기반이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인의 참여 비율은 평균 58.8%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북이 65.3%, 경남이 64.1%, 전남이 62.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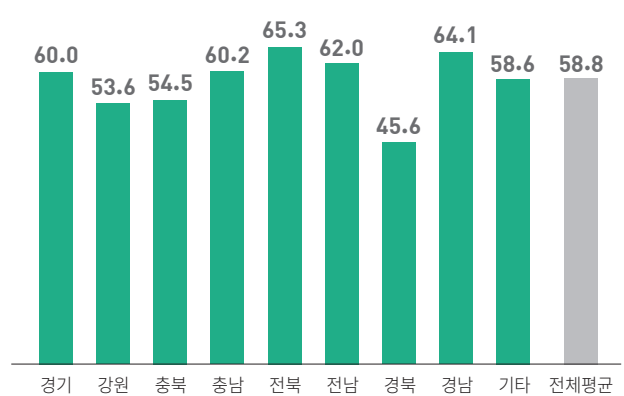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 10,000명당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Base=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제출 지자체, n=95, 단위 : 명)



지역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중 취약농업인 비율

(Base=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제출 지자체, n=95, 단위 : %)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참여농업인 대비 안전성 검사 건수 평균 0.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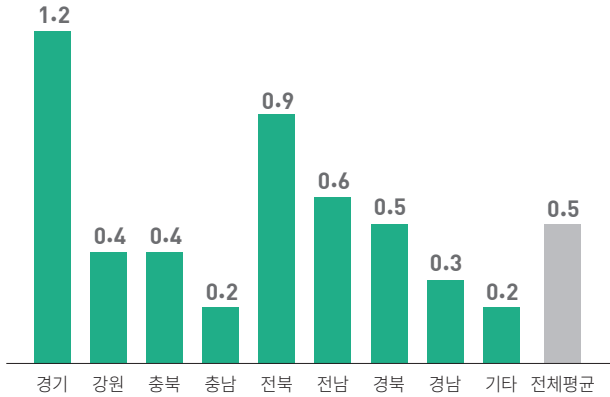
지역푸드 인증 운영 지자체 7개 지자체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대비 안전성 검사건수를 평가한 결과, 전국 8개도 중 경기 지역이 참여농업인 대비 연간 1.2건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인 0.5건에 비해 약 2.4배 높게 나타났고, 안전성 검사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참여농업인 대비 안전성 검사 건수는 0.2건이었다.

159개 지자체 중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푸드 인증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양시, 아산시, 옥천군, 원주군, 원주시, 전주, 춘천시 등 7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역별 참여농업인 대비 안전성 검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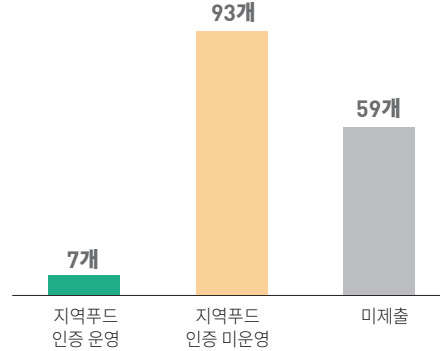
(Base=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제출 지자체, n=95, 단위 : 건)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푸드 인증 운영 여부

(Base=로컬푸드 지수 측정 시군, n=159)



공급 조달 영역에서 로컬푸드 확산 노력 필요

참여농업인 기반한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해야

로컬푸드의 안정적 소비처와 지역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 공공조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급식 분야에서 참여농업인 기반의 로컬푸드 생산, 유통, 소비의 공공 조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향후 학교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 시 참여농업인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로컬푸드가 중소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중 월평균 로컬푸드 소득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농업인 비율은 평균 12.9%로 조사됐다.

먹거리 정책의 시민 참여를 위한 먹거리위원회 운영 지자체 18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11개

지역민 중심의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지자체 내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해 본 결과 159개 지자체 중 총 18개 지자체에서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수립한 먹거리 종합 전략인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는 완주군, 나주시 등 11개로 나타났다.